



“노동부는 유해성 무용제 도료 사용중지 명령하라”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소 등 집단 피부병 발생 ... 노동부 땀질 처방

금속노조는 9월 8일 오전 세종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앞에서 ‘노동자 건강 위협하는 무용제 도료 즉각 사용 중단 명령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소 현장에서 도장작업을 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동부가 유해 무용제 도료 때문에 조선소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음을 알고도 사용금지 조치하지 않고, 황당한 후속 조치를 내리고 있다”라며 분노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은 검증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해 노동자를 상대로 생체실험하고, 노동부는 방관하고 있다”라며 “무용제 도료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관련 조치를 시행할 때까지 금속노조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대중공업은 신규 물질을 사용하면서 사전유해위험성 평가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피부발진 사태를 일으켰다”라면서 “피부병으로 밤잠 설치며 고통받는 노동자가 계속 늘고 있다”라고 전했다.

박정환 실장은 “노동부가 무용제 도료에 따른 피부발진 사태가 심각

하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해결 의지가 있다면, 이번 화학사고를 중대재해로 판단하고 즉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동부는 친환경 도료라든가 직업병을 집단으로 발생시켰다면 사용 중지해야 한다는 금속노조의 요구에 동의했다”라며 “하지만 노동부는 국민건강을 짓밟는 후속 조치만 했다”라고 규탄했다.

박세민 실장은 “노동부는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을 보호하라는 국가기관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분을 대리해 생산 차질과 이윤 하락을 염려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노동부, 무용제 도료 유해성 확인하고도 사용금지 안 해

무용제 도료는 시너를 섞지 않은 페인트다. 화학반응을 이용해 페인트를 철판에 달라붙게 한다. 환경오염 기후위기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현대중공업그룹은 페인트 업체 KCC에 무용제 도료를 개발을 의뢰했다.

이 페인트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줄여 오존층 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해서 ‘친환경 무용제 도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오히려 노동자 집단 질병의 원인이 됐다.

무용제 도료의 유해성은 7월 노동부가 조사로 확인했다. 노동부는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 3사와 무용제 도료 제조사, 기타 무용제 도료 취급 조선소 등 10개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1,080명을 대상으로 임시건강진단과 역학조사를 시행했다.

노동부는 직업병 유소견자 55명을 확인했다. 피부질환 원인으로 지목한 무용제 도료의 유해성도 밝혔다. 무용제 도료에 들어간 피부 과민성 물질의 과민성 지수가 기존 사용 용제형 도료보다 높았고, 기존 사용 도료에 없던 새로운 과민성 물질이 다수 들어 있었다.

노동부는 지난 8월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등에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 명령’을 내렸다. ▲회사 화학물질 도입 체계에 피부 과민성 평가항목 추가 ▲내화학성 장갑, 보호의 등 적정보호구 지급·착용 등 땀질 처방이 전부였다.

노조는 이날 노동부와 면담했다. 노조는 ▲무용제 도료 사용중지 명령 ▲피해 노동자 진단 절차 간소화 ▲산재처리 명령 통한 치료방안 마련 ▲신규 도료 도입 전 인체 위험성 사전 검증과 안전한 물질 도입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철회 촉구 도보투쟁

노조 경남지부, 경남·부산 일대 순회 ... 15일 결의대회·9월 30일 상경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9월 8일 ‘대우조선 불공정 특혜매각 철회, 남해안 조선 기자재 벨트와 중소 조선소 사수를 위한 경남살리기 노동자·시민 도보투쟁’에 나섰다. 도보행진 거리는 274km이다.

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를 주축으로 만든 도보행진단은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통영, 고성, 함안, 김해, 양산을 거쳐 경남도청으로 향한다. 도보행진을 마무리하는 15일에 경남도청 앞에서 경남도민의 여론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우조선 매각 투자계약 기간을 세 번 연장했다. 매각발표 6개월 이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호언장담했지만, 3년째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9월 말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약속한 세 번째 투자계약 기한이 다가오지만, 다시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신상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장은 “문재인 정권이 대우조선 매각을 3년째 마무리 못했다. 정권 스스로 잘못된 매각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상기 지회장은 “문재인 정권은 무조건 대우조선을 정몽준 현대중공업 자본에 갖다 바치려 한다”라며, “정권이 투자계약 기한을 다시 연장한다면 대우조선지회는 더는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경고했다.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금속노조는 도보행진에 처음부터 함께 하고,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라며 결의를 밝혔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경남지부 집행위는 2인 1조로 8일간 일정에 함께한다”라며 “9월 말 상경투쟁에 가능한 모든 전술을 동원해 책임 있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변광용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대우조선지회 노숙농성 참여를 약속했다. 서일준 의원은 350만 도민의 여론은 대우조선 매각철회라며 함께 투쟁한다고 약속했다.

노조 경남지부와 대우조선지회는 9월 15일 경남도청 결의대회 후, 16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벌인 뒤 1인 노숙농성에 돌입하며,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체 조합원 상경 투쟁을 전개한다.

이날 거제 시민들도 나와 도보행진단을 응원했다. 대우조선지회가 연대하는 사회복지기관 실로암의 주민들이 나와 도보행진단을 응원했으며, 차를 세우고 응원의 목소리를 내거나, 아파트 창문을 열고 응원하는 시민도 있었다.

“인간파괴 · 노조파괴,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금속노조 · 민주노총, 노동법 개정 · 노조파괴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 “복수노조 제도 악용 노조파괴 확인, 법 개정 시작해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국회에 민주노조 무력화 도구인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 폐기와 제도를 악용한 자본을 수사·처벌하기 위한 관련 법 제·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9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 폐지, 복수노조 악용 노조파괴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안에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 폐지 ▲국정감사에서 복수노조 제도 악용, 민주노조 탄압 부실 감독·수사·처벌 책임 규명 등을 요구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노동자는 노조파괴와 복수노조 차별 등 노동기본권 박탈을 매일 겪는데, 국회의원은 노조파괴 문제를 작년에 다룬 철 지난 문제라며 무시한다”라고 비판했다.

한상규 총연맹 부위원장은 “국회 날치기 통과한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 시행 이후 10년 동안 국정감사에서 노조파괴 문제를 다뤘다”라면서 “호통치는 국정감사에서 벗어나 창구 단일화 제도 폐해를 날같이 밝히고, 모든 노동자가 교섭권을 보장받도록 법을 바꾸는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원우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장은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친사 어용노조’를 설립해 삼성지회를 고사한다는 노조파괴 전략을 시행했다”라면서 “어용노조인 에버랜드 기업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악용해 취업규칙에 불과한 영터리 단체협약으로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했다”라고 악용사례를 밝혔다.

박원우 지회장은 “국회와 정부는 삼성이 대놓고 노조파괴 만행을 저지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면서 “자본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노조 탄압·파괴 도구로 악용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는 200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추미애와 한나라당이 안전 상정 15분 만에 날치기 통과한 노동악법이다. 2021년 올해 시행 10년을 맞았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을 막고,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장치로 쓰인다고 지적해왔다.

삼성, 유성기업 등 자본가들은 창조건설링 같은 노조파괴 범죄집단과 공모해 어용노조를 다수노조로 키워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빼는 등 창구 단일화 강제제도를 악용했다.

금속노조는 2020년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현재 금속노조 법률원이 주관해 관련 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